

2012년 남북관계연표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Online Series CO 13-02

- 1월 1일 | 북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 1월 2일 |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대화를 통해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
- 북한이 진행 중인 핵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임. 우리는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임.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과제임. 주변국들도 기꺼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함.
- 1월 2일 | 류우의 통일부 장관, 신년사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으며 폐쇄와 낙후에 빠지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언급
- 1월 5일 | 북한 조평통,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대해 “큰 변화니 뭐니 하고 떠든 것은 아직도 체제대결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 나지 못한 자의 가소로운 녀두리”라고 비난

- 우리는 원수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

1월 11일 | 북한 외무성, 작년 7월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우라늄 농축 임시 중지 등을 북한 제재 임시 중지, 식량 제고 지원 등과 연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

- 미국이 초기에 논의되던 30만t 이상의 식량지원과는 다르게 제공량과 품목을 대폭 변경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신뢰조성의지에 대해 의문시 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토의한 개선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임.

1월 16일 | 미국 AP통신, 평양에 종합지국 개설

1월 17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농작물종자 관리법(5개장, 43개조)이 제정되었다고 보도

1월 17일 | 미국 국무부, 한미일 3자협의 뒤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 약속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

- 우리는 대화 재개를 위한 길이 북한에 열려 있으며, 대화를 통해 한미일과 관계를 개선할 길이 북한에 열려 있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음.

1월 1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고등교육법(7개장 68개조)을 제정했다고 보도

1월 25일 | 유니세프,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중 급성 영양실조와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비율이 각각 14.9%와 2.9%로 전체 영양실조 아동 비율은 17.8%로 집계됐다고 발표

1월 3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8개장 51개조)·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10개장 72개조)·외국투자기업회계법(4개장 59개조)을 수정·보충했다고 보도

1월 30일 | 국제평화연구소(SIPRI), '불법해상수송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무기 운송 적발 선박수가 세계 4위라고 발표

1월 31일 | 북한 4.25축구단 유소년팀, '2012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U-14) 축구대회'에서 인천구

단의 유소년팀인 광성중학교와의 경기 거부

- 1월 31일** | 미국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무기시스템 수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
 -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탄도미사일과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북한의 확산 행위를 보여주는 것
- 2월 1일** | 미국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 직후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회담 재개와 관계개선의 길이 열려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
 - 오늘 면담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 필요성과 그 공동성명의 핵심목표인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음.
- 2월 2일** |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 공시를 통해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
- 2월 2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우리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조문 태도를 사죄하라고 요구(9개 질문사항)
- ① 우리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결심이 되어 있는가.
 - ②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리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하겠는가.
 - ③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걸고 우리를 더 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는가.
 - ④ 우리를 과녁으로 삼고 벌리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할 정책적 결단을 내리겠는가.
 - ⑤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되어 있는가.
 - ⑥ 악랄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 ⑦ 북남협력과 교류를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번영과 공리공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재개하고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가.
 - ⑧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에 호응해 나설 수 있는가.
 - ⑨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들을 즉시 철폐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 2월 3일** |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북한 내부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장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

2월 7일 | 산림청장, 북한 국토보호상 앞으로 ‘고구려 고분군 산림 병충해 방제 문제 협의 관련 통지문’ 발송

- 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2월 1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외국투자기업등록법(6개장 34개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이 수정 보충되었다고 보도

2월 10일 | 국회 남북관계특위와 외통위 의원 8명, 개성공단 방문

- 김충환·남경필·구상찬·김동철(외통위), 박주선·김성수·박선숙·이정현(특위) 의원

2월 12일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실무접촉(2.9~11, 중국 선양)에서 6.15 공동선언 12주년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안

2월 14일 | 대한적십자(이하 한적), 북한 조선적십자회(이하 북적)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 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2월 16일 | 북한 조선중앙TV,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동결정을 발표 보도

2월 16일 |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시아 평화가 달렸다고 주장

2월 17일 |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이하 UNHCR), 중국 정부에 북송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에 대해 안전보장이 확인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

2월 18일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2012년 4월 중순에 조선노동당대표자회 소집 결정 발표

2월 19일 | 북한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공개통고장을 통해 서해 5도 일대에서 20일 실

시예정인 한미군사훈련과 관련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

- 서해 5개섬과 그 주변에서 살고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민간인들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도발적인 해상사격이 시작되는 20일 9시 전에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할 것임.
- 우리 군 2월 20일 사격 훈련 실시

2월 19일 | 외교통상부,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복송 우려와 관련 중국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

2월 21일 | 중국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고 강조

2월 22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남북의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언급

- 북한이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미래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있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함. 기다리면서 남북관계가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 정부와 협력을 하게 될 것임.

2월 23-24일 |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북경)

-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미국측은 북한의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 북측은 30만t 규모의 곡물지원과 대북제재 해제 등을 주장

2월 24일 | UNHCR,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송환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

2월 25일 | 북적, 탈북자 송환 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괴뢰역적패당의 탈북자 복송반대 소동은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 광란극”이라고 비난

2월 25일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북미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서울 외교부 청사)

-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북미관계의 근본적 진전은 없을 것

-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북한이 얼마나 식량을 필요로 하는지와 미국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임.
- 북한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 북한지도부가 대화의 장에 나오기로 결정했음.

2월 25일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관련 비난 성명 발표

-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애도기간을 노리고 감행되는 불한당들의 용납할 수 없는 전쟁광기이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

2월 27일 ~ 3월 9일 | 한미 키 리졸브 훈련 실시

2월 27일 | 국회,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2월 27일 | 중국 외교부, 푸잉 부부장 방북(2.20~24), 식량원조 문제 협의

2월 29일 | 북한 외무성, 제3차 미·북대화 관련 결과 발표

-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음.
-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 취하기로 하였음.
-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음.
-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냉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립시 중지하고 우라니움 농축활동림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3월 2일 | 이명박 대통령,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3월 2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내무반에서 벽과 문에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아래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버젓이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탕짓을 벌여놓고 있다”고 비난

3월 4일 | 국방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해 “이번 북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

- 3월 4일 | 북한 외무성 조평통, 담화를 통해 우리 군부대 내무반에 부착된 구호 관련, ‘최고 존엄’에 대한 무분별한 증상모독행위이며,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비난
- 3월 6일 |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진행 중인 실험용 경수로 건설 공사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
- 3월 7-8일 | 미·북 대북 식량(영양) 지원 회담 개최
-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 3월 8일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월호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국가로 분류
- 3월 12일 |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언급
- 3월 13일 | 국정없는기자회, ‘2012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터넷 적대국으로 지목
-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이틀간 비밀로 지켜지다가 조선중앙TV의 특별방송으로 발표된 것은 언론과 정보에 대한 북한정권의 철저한 통제를 보여준다고 지적
- 3월 14일 | 정명훈, 북한 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합동공연 지휘(파리)
- 3월 16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로켓)’ 발사계획 발표
- 광명성-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켓은 은하-3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됨.
- 3월 16일 | 외교통상부,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담화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논평
-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3월 16일 | 미국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매우 도발적인 계획”이라고 비난

-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삼가겠다고 다짐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임.

3월 16일 ~ 4월 13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AP 공동사진전 뉴욕에서 개최

3월 19일 ~ 4월 2일 | 남북 종교단체 협의(북경, 심양)

3월 19일 | 정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관련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 계획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음 주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에 미, 일, 중, 러, EU 등 관련국 정상들과 협의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음.

3월 19일 | 북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신고

-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Bright Star-3)’를 다음달 12~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임.

3월 19일 | 미국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언급

- 사찰단 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꿔 놓지는 못한다고 강조

3월 21일 | 미국 국방부, 로켓 발사계획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유해발굴 작업 중단 발표

3월 21일 | 미국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핵 사찰단 파견 문제를 놓고 IAEA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

3월 22일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한국 등 43개 나라가 공동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없이 채택

3월 23일 | 북한 조평통, 2012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광명성 3호 발사를 거론한다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

3월 26-27일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 미·중·러·일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

3월 27일 | 북한 외무성,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인 평화적 위성발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3월 27일 | 류우익 통일부 장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

-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함.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3월 31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대북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2.29 조미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미합의를 통째로 깨버리는 유감천만한 행위로 될 것”이라고 비난

4월 1일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금강산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을 환영하며 그들이 관광을 즐기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

4월 1일 | 미국 의회조사국(CRS),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제네바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 1천 375만 달러(약 1조 4천 870억원)로 집계

4월 5일 | 북한 조평통, 우리 군의 ‘평양 보복타격’과 ‘광명성 3호 위성’ 요격 발언에 대해 “무모한 군사적 도발시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비난

- 만일 그 누가 무슨 구실로든지 우리의 령공, 령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거나 우리의 위성발사체 잔해물에 대한 요격과 회수놀음을 벌린다면 우리는 즉시 가차없이 무자비하고도 섬멸적인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임.

4월 6일 | 북한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담화 발표

- 북한은 이 담화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첫 노작으로 규정

4월 10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 논평

-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하게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 북한이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해결의 길로 나서기를 촉구함.

4월 11일 | 북한, 제4차 당대표자회 개최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4월 13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3호 발사가 4월 13일 오전 7시 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되었으나, 궤도진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도

4월 13일 | 정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 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임.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함.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임.
- 북한이 만성적 식량부족 등 절박한 민생 문제를 제쳐두고 막대한 재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4월 13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 개최

-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

4월 13일 | 미국 벨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

4월 15일 | 북한, 김일성 100회 생일 대규모 중앙보고대회 개최

- 김정은 군 열병식서 첫 공개연설

4월 16일 | 조선신보,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가 2012년부터 시작된 북한 ‘우주개발 5개년계획’의 첫 단계 사업이었다고 보도

4월 16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강력히 규탄하는(strongly condemn)’ 의장성명 채택

-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함.

4월 16일 | 이명박 대통령, “북한이 살 길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라디오인터넷 연설

- 이번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 29일 북·미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영양 지원 24만 톤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린다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음.
- 북한은 변화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음. 어느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음. 북한 스스로 변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임.

4월 16일 |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관련 성명 발표

-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하여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또는 도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기존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시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한 것을 평가함.

4월 17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
-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 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올릴 것

4월 17일 | 미국 마크 터너 국무부 부대변인, “2.29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영양지원을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측 약속(영양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언급

4월 18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행사 기간에 남측 반북단체들의 활동이 “동족의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

고 있다고 비난

- 서울 한복판이 최고준엄을 모독한 도발원점이 된 이상 모든 것을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 조치를 취할 것임.

4월 18일 | 일본 요미우리 신문,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17개 기관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을 요구했다고 보도

4월 19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우리에게는 우주개발기구들을 최첨단 요구에 맞게 확대 강화하고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고 주장

- 지금 미국이 몇푼어치의 식량 지원 보따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우주개발권리를 빼앗으려 획책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음.

4월 19일 | 미국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 상원세출위원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이번 실패는 북한이 우주항공 프로그램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

4월 20일 | 이명박 대통령,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최고위과정 강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농지개혁 단행을 촉구

- 우리가 북한 경제를 자립시켜야 된다는 것이 초지일관된 생각임. 밥 먹이는 건 쉬움. 중국이 흉년지면 굶어 죽고 했는데 오늘날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 집단농장 할게 아니고 쪼개 바칠 건 바치고 네가 가져라 하면, 북도 그러면 쌀밥 먹는 거 하나는 2, 3년 안에... 북한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농지개혁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벌고,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는다. 북한은 그걸 해야 되는 것임. 짧은 지도자가 그것 하나하면 되는 것임. 제도만 바꾸면 됨. 그것만 하면 식량은 해결되는 것임. 가장 시급한 것임.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함.

4월 23일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교육원 특강내용, 1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발언에 대해 비난하며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위협

4월 23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과 관련 북한이 대남위협·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올 것을 촉구

4월 23일 | 미국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과 관련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북한 정권은 분명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 연속적으로 도발을 해왔다 따라서 도발을 배제할 수 없음.

4월 27일 | 북한 김정은, 당·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에게 한 담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 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발표

- 김정은 두번째 노작

4월 27일 |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North, 북한의 과거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용 갱도굴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탄광차 행렬과 여타 작업이 위성사진에 포착되었다고 발표

- 이 사진들을 보면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 준비를 해왔음이 분명하지만 언제 실험을 단행할 지는 명확하지 않음.

4월 27일 | 한·미, 제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최근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위협 시나리오’를 공동연구·개발하기로 합의

5월 1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미·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 북한의 도발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임.

-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끌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좋은 행동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의 오래된 패턴은 무너졌음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고 취임 이후 계속 주장했음.

5월 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기업 3곳 추가 제재 결정(총 11개 단체)

- 추가 제재 대상 : 청송연합, 압록강개발은행, 조선흥진무역회사

5월 2일 | 프리덤 하우스, ‘2012 국제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 자유상황이 전세계 197개국 가운데 최악이라고 발표

5월 2일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조산 보고서’에서 북한의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조산이라고 발표

- 조사 대상 184개국 중 80번째로 높은 수치

5월 4일 | 한국 수출입은행, 북한 조선무역은행에게 북한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기일(6월 7일) 통보

- 5월 6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정에 대해 비난
- 우리는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기초해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임.
- 5월 10일 | 북한 조평통, 한미 정부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비용 문제 지적에 대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억제력을 비롯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
- 5월 12일 | 통일부 장관, ‘통일항아리’ 제작 행사(경북 문경)
- 5월 16일 | 세계보건기구(WHO), ‘2012 세계보건통계’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을 평균 70세로 추정
- 2010년 북한 총인구 2천 434만 6천명, 중간나이를 33세, 북한 인구 중 15세 미만 어린이는 23%, 60세 이상 노인은 14%로 추정
- 5월 16일 | 미국 하원,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가결 처리
- 5월 18일 | 유엔개발계획(UNDP), ‘2012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인구 중 26%만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발표
- 2009년 현재 북한의 전력사정은 20개 아시아 국가 중 5번째로 열악한 수준, 2008년 북한의 1인당 전력 사용량 809kWh에 불과
- 5월 18일 | 북한 체신성 대변인,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간 우리측 영공과 해상에서 감지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전파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우리 정부의 모략 날조극이라고 주장
- 5월 19일 | G8 정상회담 공동성명,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더 심한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 5월 22일 | 북한 외무성, G8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8개국 집단의 무모한 정치적 도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
-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강화될 것임.

-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음.

5월 23일 | 미국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과 관련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대남비방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

5월 30일 |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했다고 보도

6월 4일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을 통해 5월 29일부터는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의 A채널방송과 KBS, CBS, MBC, SBS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일제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펴고 있으며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새로운 악행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

- 역적패당의 본거지들인 조선일보사는 서울시 중구 북위 37° 56' 83" 동경 126° 97' 65" 위치에, 중앙일보사는 서울시 중구 북위 37° 33' 45" 동경 126° 58' 14" 위치에, 동아일보사는 서울시 종로구 북위 37° 57' 10" 동경 126° 97' 81"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KBS, CBS, MBC, SBS 방송국자리표도 확정해놓은 상태

6월 8일 | 한국수출입은행,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통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요구

6월 11일 | 북한 조평통, 공개질문장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등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의 친북·중북 언행을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

- 남측의 전직, 현직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음.

6월 12일 | 유엔, 북한의 인권 상황 최신 보고서에서 수많은 북한 어린이가 신체와 정신 발육에 필요한 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

- 5세 이하의 북한 어린이 중 3분의 1이 발육이 늦고 특히 농촌의 식량난은 심각하며 깨끗한 물, 위생, 전기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워 많은 어린이가 이질로 죽어가고 있음. 병원은 깨끗하지만, 텅 비고 물, 전력, 의약품 공급이 부족

6월 12일 | 미국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동으로 평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6월 13일 |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 자국기업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탑재차량을 판매했다는

보도를 비난

- 중국은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의 확산에 결연히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자체적인 반확산 수출 법규를 준수해 왔음.

6월 18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보도

6월 20일 | UNHCR, 세계 각지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자가 지난해 말 현재 1천 52명이라고 발표

- 또 난민 지위를 받으려고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가 작년 말 현재 490명

6월 20일 | 미국 상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

6월 30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긴 북한의 불법화물이 중국 다롄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운송망을 통해 이동한다는 내용이 안보리의 문서로 공식 채택

7월 2일 | 이명박 대통령, 제19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통일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언급

-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임. 평화통일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음.

- 북한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음.

7월 5일 | 북적, 탈북여성 박정숙 재입북 기자회견을 통해 “괴뢰패당의 비열한 유인·납치·인권유린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죄와 북한 주민의 전원 송환 촉구

- 괴뢰패당에게 속아 남조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서 자란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대해서는 언제든 자애로운 품으로 안아 재생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임.

7월 13일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 한반도 문제 관련국은 어떠한 추가 도발을 해서도 안되고 유엔안보리 결의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함.

7월 15일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리영호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참모장

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키로 결정

- 7월 16일 | 이명박 대통령, 통일항아리에 금일봉 기부
- 7월 16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상환 만기가 도래한 대북 식량차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에 유감을 표시, 성실한 이행을 촉구
- 7월 16일 | 북한 조평통, 남한과 미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침투한 테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
- 해당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얼마전 괴뢰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적발, 체포됐음.
- 7월 18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낮 12시 중대보도를 통해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결정 보도
- 7월 20일 | 북한 외무성, 김일성 동상을 파손하려다 체포됐다고 주장한 탈북자 전영철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제반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
- 7월 25일 | 북한 외무성, 정전협정체결 59주년 즈음 담화에서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용단 촉구
-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억제력을 먼저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임.
 - 말로만 적대시 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구실이나 전제조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실천행동으로 그를 증명해 보여야 함.
 - 우리에게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회군을 송두리째 들어내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음.
- 7월 29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전영철 사건과 관련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국가정치테로에 강한 물리적 대응 공세로 맞설 것”이라고 비난
- 7월 31일 | 북한 외무성,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북한을 집중적으로 걸고드는 정치적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핵억제력 강화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선택임.

- 8월 8일 | 한적, 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 8월 9일 | 북적, 5.24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를 구실로 우리측 제의(8.8) 사실상 거부
- 북남사이의 모든 인적래왕과 협력사업을 가로막는 <5.24조치>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장소인 금강산길까지 다 막아놓고 상봉을 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말도 안되는 것
- 8월 15일 |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평가
-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음.
 -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함.
 -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
 -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임.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임.
- 8월 18일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
- 8월 20일 | 한적, 국제적십자연맹(IFRC)을 통해 북한에 수해복구 관련 10만불 지원 발표
- 8월 20일 | 북한 외무성,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공화국을 노린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8월 25일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개시 52주년 '8.25 경축연회'에서 연설
-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에 나가 만약 적들이 우리 영토와 영해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즉시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 이행에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했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했음.
- 8월 27일 | 국토해양부 장관, 2009년 남북간 합의대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시 우리측에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 발송
- 8월 31일 | 북한 외무성, 비망록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

는 경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위협

- 조선반도 핵문제도 다름아닌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임.

9월 3일 | 한적,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9월 10일 | 북적, 우리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에 수용의사를 통보하면서, 지원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청

9월 11일 | 한적, 통지문을 통해 밀가루 1만톤, 라면 300만개, 의약품 및 기타 물품 등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달하고자 하며,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과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

9월 12일 | 북적, 수해지원 관련 지원 품목 및 수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원 거부 통보

9월 15일 | 북중,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

9월 21일 | 우리 군, NLL 침범한 북한 어선에 경고 사격

9월 22일 | 북한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우리 군의 NLL 침범 북 어선에 경고사격을 가한것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마치 우리 어선들이 넘은 것처럼 거짓과 억지주장을 꾸며냈다”고 주장

9월 25일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개최

-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법령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2명의 보선과 예산위원회 위원장 교체

9월 27일 | 북한 식량차관 상환 촉구 대북 통지

9월 27일 | 북한 조평통,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5.16 쿠데타’와 ‘유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난

- 새누리당 후보의 집권은 유신 독재의 부활과 북남사이 대결의 격화, 전쟁 위협의 증대 밖에 가져올 것이 없음.

- 9월 27일 | 북한, 평안남도 서해안에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1발 시험발사
- 9월 28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의 미얀마 대북관계 단절 요구에 대해 “우리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
- 9월 28일 | 통일부 대변인, 9월 27일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이 우리 내부의 대선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을 한 것은 도를 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 촉구
- 9월 29일 | 북한 국방위 정책국, 서해 5개섬 주변수역에서 우리측이 영해 깊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
 -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병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
 -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우리의 국가주권과 영해에 대한 침범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며 우리의 국방과 안전을 해치려는 로골적인 침략행위
- 10월 5일 | 조선신보, 남한의 차기 정권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면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언급
- 10월 6일 | 북한군 1명,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
- 10월 10일 | 북한 조평통, 한미 양국 간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포함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비난
 - 미사일 정책선언은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 선포이며 전면전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노골적인 도발
- 10월 10일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 온 북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미 양국의 새 미사일지침을 비난
 -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제재소동을 고취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도 할 말이 없게 됐음.
- 10월 13일 | 금강산 신계사 복원 5돌 기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개최
 - 조계종 지홍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 19명 방북

10월 15일 | 북한 어선 1척, 백령도 인근 NLL 월선, 우리 군의 경고통신 후 복귀

10월 18일 | 이명박 대통령,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인근인 연평도 군기지 방문

-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 해병 장병들이 인식을 해야 함. 요즘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 될 때까지는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며,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

10월 19일 | 북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 탈북자단체들이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뼈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

- 지금 이 시각부터 괴뢰들의 뼈라살포지점으로 공개된 파주시 임진각과 그 주변은 우리 군대의 직접적인 조준격파사격 대상이 될 것
- 뼈라살포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이며 그것은 곧 정전협정에 대한 파기행위이고 우리에게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

10월 19일 | 북한 어선 1척, 연평도 서북방 NLL 월선, 우리 군의 경고통신 후 복귀

10월 19-20일 | 통일부, 민간단체를 방문하여 전단살포를 자제할 것을 요청

10월 20일 |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10.18) 발언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정전협정에 전면 배치되는 유령선’이라며 ‘서해바다를 아무선도 없는 바다로 만들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

10월 20일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발언에 대해 “조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현시기 북방한계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그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가 아니면 대결과 전쟁을 바라는 가를 가르는 척도

10월 22일 | 국내 탈북자 단체, 임진각에서 계획했던 대북 전단지 살포 경찰의 임진각 진입로 통제로 무산

10월 25일 | 북한 외무성,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발언(‘북한 위협적 행동 중단’ 등)에 대해 ‘9.19 공동성명 이행 의무를 미국은 하지 않고 북한에게만 하라는 것은 언어도

단' 이라고 주장

- 미국의 가중되는 적대정책은 우리가 핵 억제력을 더욱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데로 떠밀었음.

10월 25일 | 북한 경비정 1척, 백령도 인근 NLL 침범, 우리군의 경고 사격 후 복귀

11월 1일 | 북한, 한미 양국이 제44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한 것에 대해 “위험천만한 흥계”라고 비난

- 북방한계선은 미제침략군이 정전협정과 배치되게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

11월 3일 | 북한 조평통, “남조선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선을 계기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11월 4일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가 채택

- 체육지도위원장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11월 8일 | 북한 조평통,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을 ‘전면대결공약’이라고 비난

- 이번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대결이 한층 첨예화돼 북남관계가 더욱 파국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내외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

11월 15-16일 | 북일 국장급 회담 개최(몽골)

- 후속회담 조기 개최 합의

11월 15일 | 북한 노동신문,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라는 글에서 남한의 차기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그동안 중단된 남북한 협력사업이 전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

11월 26일 | 북한, ‘전국 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 개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란 제목의 서한 전달

- 사법검찰일꾼들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법

적으로 엄격히 다스려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라

11월 28일 |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

11월 29일 | 북한 외무성,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적들의 정치모략 선전물”이라고 비난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서방 세력들은 날로 높아만 가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위상을 깎아내리려고 해마다 가소로운 정치협잡 행위를 일삼고 있음.

12월 1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공식 발표

-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서 운반로켓은 은하-3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12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발사하게 됨.

12월 1일 | 외교통상부,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

- 북한이 재차 발사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

12월 1일 | 일본 정부, 북일회담(12.5~6, 베이징) 연기 발표

12월 1일 | 미국 국무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

12월 1일 | 북한 조평통,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개질문장 발표

①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확약한 공동선언들을 외면하면서 북남사이에 무슨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며 정상회담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②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호상존중과 신뢰, 협력관계를 어떻게 이룩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③ 선택포기니 뭐니 하는 것이 비핵, 개방, 3000과 무엇이 다른가.

④ 억지력강화와 외세와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평화요 뭐요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⑤ 북인권법 이요 뭐요 하는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정상화할수 있다고 생

각하는가.

- ⑥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북남대화와 협력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보는가.
- ⑦ 리명박패당의 대결정책과 대담하게 결별하고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에 나설 의지는 없는가.

- 12월 4일 | 중국 외교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큰 틀에서 출발해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고 입장 발표
- 12월 6일 | 북한 조평통,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우리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복 국제공조를 실현해보려는 흥책”이라고 비난
- 12월 6일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
- 12월 7일 | 조선신보,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필수적 공정’이라는 글에서 “광명성 3호 발사가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며 “다음 단계는 정지위성의 개발이다. 은하 3호보다 더 큰 대형 운반 로켓의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설명
- 12월 8일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진상공개장에서 “금강산관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 어떤 구실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
 - 우리는 앞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이 다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 12월 9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 12월 10일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광명성-3호 2호기 운반로켓의 1계단 조종 발동기 계통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발사예정일을 12월 29일까지 연장하게 된다”고 발표
- 12월 12일 | 북한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
- 12월 12일 |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정부 성명 발표
 -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임.

- 북한은 이번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임.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는 막대한 재원을 절박한 민생 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12월 1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

12월 12일 | 북한 외무성,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김정일 동지의 유훈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 누구 뭐라고 하든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계속 행사하면서 우주를 정복해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 것임.

12월 14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2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보도

12월 14일 | 북적, 한적이 최근 이산가족 모습을 담은 영상편지를 제작해 북한에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재집권 기도를 위한 유치한 술책”이라고 비난

12월 16일 | 북한 노동신문, ‘악몽의 5년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번영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면 기꺼이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주장

12월 19일 | 한국 대통령 선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

12월 20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내외신들 보도 인용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간략 보도

12월 20일 | 국방부, 12월 22일 ~ 1월 2일간 애기봉 점등계획 발표

12월 20일 | 유엔 총회 본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최종 채택

- 결의안은 북한의 주변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 포함, 고문과 불법적 자의적 구금,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 어린이 등 취약 계층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포함

12월 21일 | 조선신보, ‘실패한 대결정책과의 결별을 요구’라는 글에서 북한 조평통이 12월 1일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후보에게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면서 “대결인가 대화인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북남관계 파탄인가 개선인가, 제2의 이명박인가 아닌가라는 물음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조선의 변함 없는 관점과 입장”이라고 보도

12월 21일 | 북한 조선중앙통신, 지난 11월 3일 라선시에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던 미국국민 배준호가 반공화국적대범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기관에 억류되었다고 보도

- 배준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금 법적취급을 받고 있음.

12월 21일 | 국방부, 2012 국방백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규정

12월 23일 | 국방부, 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 잔해물 3점이 추가로 수거됐다고 발표

- ‘은하-3호’의 1단 추진체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 수거(12월 14일)

12월 24일 | 북한, 서부전선 애기봉 등탑 점등에 대해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킴으로써 대결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위협

12월 28일 | 북한 조평통, 국방부가 2012 국방백서에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공식화 한데 대해 “전쟁의 불씨를 다음 정권에 넘겨주어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난

-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국이 남의 집 마당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날강도적인 불법·무법선이라는 것을 논할 여지도 없음. 그것은 영해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과 규범들을 난폭하게 무시한 비법선임. © KINU 201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